

현안보고서

트렌드 분석 및
빅데이터실
김장우 연구위원

보완수사권 폐지

관련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

2026년 8월 7일

'보완수사권 폐지' 관련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

여의도연구원 트렌드 분석 및 빅데이터실 김장우, 2026.8.7.

■ 요약

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형소법 개정(7/31 국회 통과·8/4 국무회의 의결) 국면의 중장기 온라인 여론은 **전 채널에서 부정 우세 및 지속적 부정 여론 강화 추세**. 특히 '장윤기 사건'·'부산 돌려차기 피해자'가 사안과 강하게 결합되며, **제도 논쟁이 "피해자 대 범죄자" 구도로 전환된 것이 최대 특징**

① 감성 구성비율 (긍정 = 폐지 찬성 / 부정 = 폐지 반대·정부여당 비판)

- 온라인 전체(N=65,586): **부정 56.41%** > 중립 29.17% > 긍정 14.42%
→ **부정 비율 6월 1주 51.11% → 8월 1주 64.94%로 상승**
- 유튜브(N=20,971): **부정 77.28%** / 긍정 10.44% / 중립 12.28%
- 네이버뉴스(N=28,203): **부정 89.81%** / 긍정 8.45% / 중립 1.74%
- 커뮤니티(N=13,078): **부정 85.99%** / 긍정 10.19% / 중립 3.82%

② 지배 프레임 (프레임 식별 댓글 12,674건 기준, 식별률 20.4%)

- 3개 댓글 채널 종합: **피해자 보호 공백 28.6%** > 정권심판선거 21.3% > 검찰개혁 지지 11.1% > 이재명 방탄 9.6% > 입법독주·거부권 9.1%
- 유튜브: **피해자 보호 공백 34.3%** > 정권심판 19.6% > 검찰개혁 지지 12.4% > 경찰 불신 9.2%
- 네이버뉴스: **피해자 보호 공백 25.0%** > 정권심판 22.4% > 이재명 방탄 11.7% > 검찰개혁 지지 11.4%
- 커뮤니티: **피해자 보호 공백 29.9%** > 정권심판 20.6% > 입법독주·거부권 12.5% > 제도·실효성 11.8%

③ 상위 키워드 (댓글 62,252건 기준)

- 3개 댓글 채널 종합: 국민 13.5% > 민주당 12.4% > 검찰 11.5% > 경찰 9.8% > 수사 8.5%
- 유튜브: 민주당 13.3% > 국민 12.1% > 검찰 10.3%
- 네이버뉴스: 국민 18.4% > 검찰 14.2% > 민주당 12.3%
- 커뮤니티: 민주당 11.1% > 경찰 9.3% > 검찰 7.4%
- **'범죄자'(3개 채널 종합 4.6%)·'피해자'(3개 채널 종합 4.2%)가 전 채널 상위권 동반 진입**
→ 제도 이슈가 치안·피해자 언어로 치환

④ 시사점

- '피해자 보호 공백' 프레임이 전 채널 1위로, 논쟁의 중심축이 '검찰개혁 찬반'(진영 구도)에서 '피해자 보호·치안 불안'(생활·안전 구도)으로 이동. 커뮤니티에서 '경찰'(9.3%)이 '검찰'(7.4%)을 역전한 점도 같은 흐름
- 법안 통과 이후에도 부정 비율(8월 1주 64.94%)과 언급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, 10/2 시행과 후속 입법·헌법소원 국면에서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. 단, 감성 비율의 절대 수준보다 동일 기준의 시계열 변화와 채널 간 상대 비교로 해석 필요

1. 개요

- ※ 분석 개요

- 분석 이슈: '보완수사권 폐지' 관련 온라인 여론 (※분석 키워드: 보완수사권 폐지)

- 분석 데이터

① 온라인 전체 게시물 65,586건(커뮤니티·인스타그램·유튜브·네이버뉴스·다음뉴스·언론사뉴스)

② 유튜브 영상 댓글 20,971건(10개 채널 21개 영상)

③ 네이버뉴스 기사 댓글 28,203건(15개 언론사 35개 기사)

④ 커뮤니티 댓글 13,078건(FM코리아 10,368건·MLB파크 2,710건)

- 데이터 수집 기간: 2026년 6월 1일 00:00 ~ 8월 6일 23:59

- 분석 대상 커뮤니티 성격

· FM코리아: 20~30대 남성 중심, 보수 성향 대형 커뮤니티(26년 7월 기준 월간 방문 수 1억 5,700만 회)

· MLB파크: 30~40대 남성 중심, 중도 성향 대형 커뮤니티(26년 7월 기준 월간 방문 수 4,800만 회)

· 두 커뮤니티는 보수 및 중도 확장층이 중첩되는 온라인 여론 주요 관찰 대상

- 분석 방법

· 감성분석: 전체 게시물은 썬트렌드 기준, 유튜브·네이버기사·커뮤니티 댓글은 중립 최소화 원칙에 기반해 긍·부정 감성분류

· 반어·조롱·욕설은 문맥을 해석해 실질 긍·부정 태도로 환원

· 4단계 혼합 분류: ① 규칙(어휘사전) → ② 머신러닝 자기학습 → ③ 대상·정서 규칙 → ④ 작성자 성향 전파. 커뮤니티는 원 게시글(스레드) 단위 전체 맥락을 파악해 스레드 지배 성향을 잔여 댓글에 전파(중립 최소화)

· 프레임분석: 8개 프레임 사전을 구축, 댓글별 최고 점수 프레임 1개를 대표 프레임으로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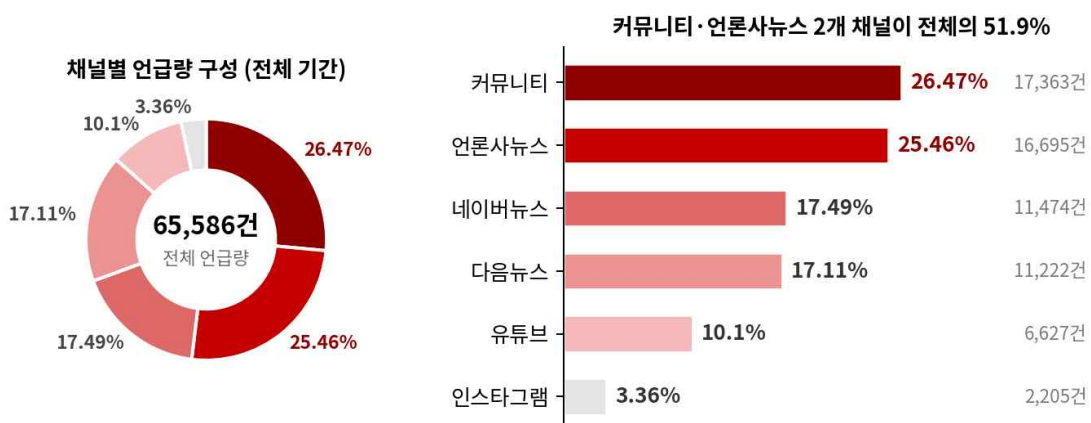
· 키워드분석: 형태소 분석(Kiwi) 기반 명사 추출 + 복합어 병합, 댓글 단위 출현율(문서빈도) 산출
- ## □ 타임라인 및 언급량
- ### ○ 데이터 분석 기간(6/1~8/6) 주요 이벤트 및 언급량 추이
- '보완수사권 폐지' 주차별 온라인 언급량 추이 (총 65,586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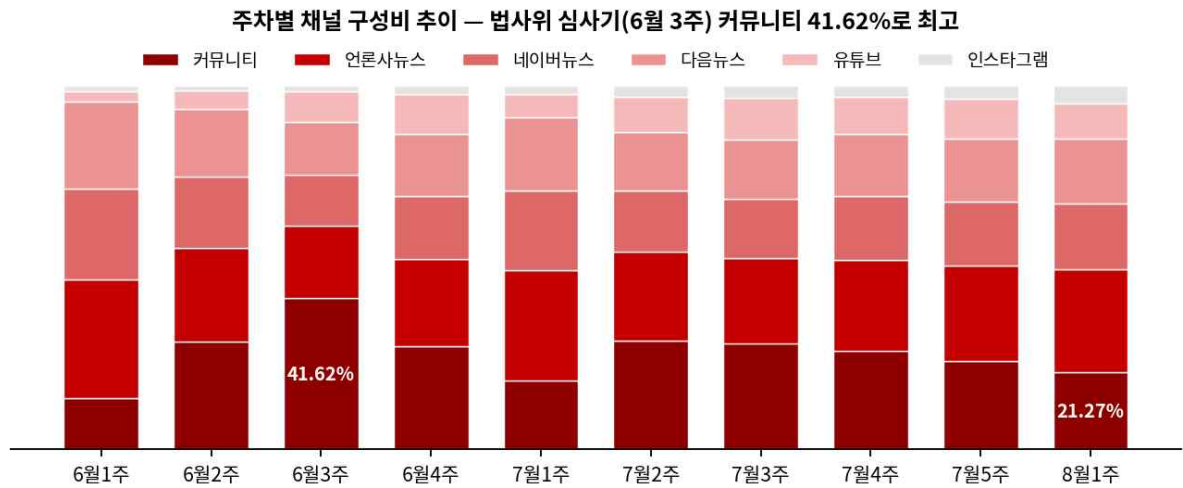
주차	언급량	주요 이벤트
6월1주	268	
6월2주	1,649	6/9 李 "국회에 결론 위임"
6월3주	1,516	
6월4주	5,373	6/26 형소법 개정안 발의
7월1주	2,920	
7월2주	9,643	7/9 법사위 심사·장윤기 논쟁
7월3주	10,700	
7월4주	9,065	
7월5주	14,926	7/31 본회의 통과 (기간 내 최고치)
8월1주	9,526	8/3~ 돌려차기 피해자 후폭풍
- 2 -

일자	주요 이벤트
6/8~9	이재명 대통령 "국민 검찰 불신 커... 보완수사권, 국회에 결론 맡기기로" 논쟁 점화
6/19~25	정청래 "전면 폐지 당연.티끌마저 없애야", 김민석 총리 "폐지로 최종 정리" 정부 입장 공식화
6/26	범여권,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→ 6월 4주 언급량 5,373건으로 1차 급등
7/8~13	민주당 법사위 단독 상정·심사 착수. '장윤기 사건'(경찰 부실 초동수사를 검찰 보완수사가 규명) 논쟁 격화,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·여성 6단체 반대 성명, 대한변협 반대 의견
7/20~28	한병도 법사위원장 "완전 폐지, 당내 이견 없어" 신중론 일축(7/22),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(7/24), 법사위 소위 의결(7/28)
7/31	본회의 통과(재석 178, 찬성 175·반대 2·기권 1,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후 표결 불참) 검찰총장대행 사퇴. 7월 5주 언급량 14,926건으로 기간 내 최고치
8/2~5	부산 돌려차기 피해자, 김용민 SNS에 "지옥에나 가세요" 항의 후폭풍 확산. 이언주 "유감" 등 여권 내 이견 표출, "국민 60% 반대 속 속전속결" 보도
8/4	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원안 의결(거부권 미행사) → 10/2 공소청·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시행 예정. 국민의힘, 거부권 촉구·헌법소원 제기 방침

- 언급량은 ① 개정안 발의(6월 4주) ② 법사위 상정·장윤기 논쟁(7월 2~3주) ③ 본회의 통과(7월 5주) 3차례 계단식 급등
→ 국면마다 이슈가 소멸되지 않고 증폭·재점화되는 구조
- 8월 1주는 4일치 집계(8/3~8/6)임에도 9,526건으로, 법 통과 이후에도 '돌려차기 피해자 후폭풍'으로 높은 언급량 유지

○ 언급량 구성(게시물 기준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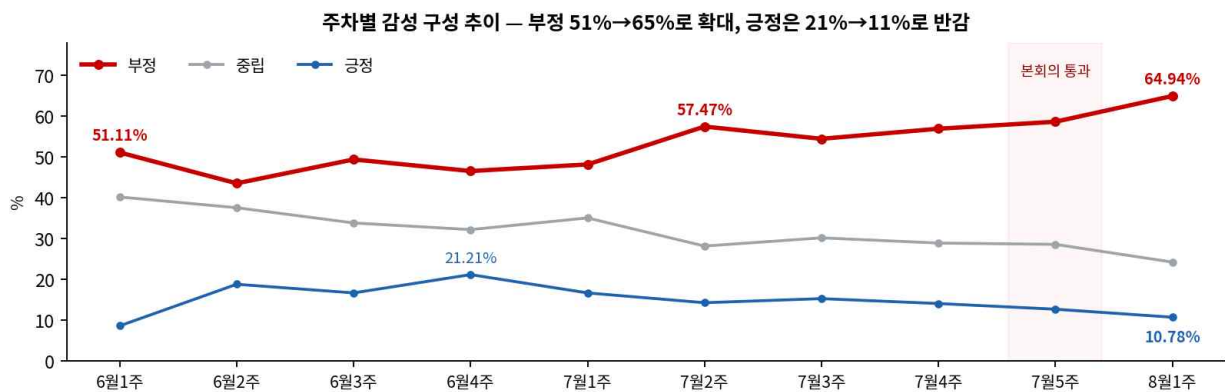
- 커뮤니티 비중(26.47%)이 전 채널 1위
→ 뉴스 소비를 넘어 이용자 자발 발화가 주도하는 이슈로,
특히 법사위 심사기간(6월 3주)에는 커뮤니티 비중이 41.62%까지 상승
- 유튜브 비중도 6월 1주 2.99% → 7월 3주 11.44%로 상승
→ 정치 유튜브·뉴스 클립을 매개로 한 확산 경로 확인

2. 분석결과

□ 온라인 전체 게시물 분석(N=65,58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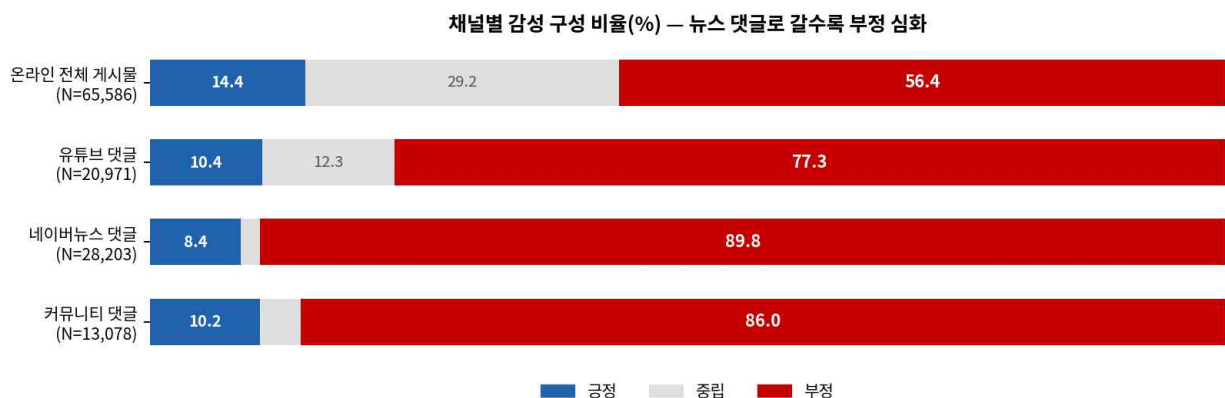
○ 감성구성비율

- **부정 56.41%** > 중립 29.17% > **긍정 14.42%**



- **부정 비율**은 6월 1주 **51.11%** → 8월 1주 **64.94%**로 기간 내 **13.83%p 상승**,
 긍정은 6월 4주 **21.21%**를 고점으로 8월 1주 **10.78%**까지 반감
 → **법안이 실현될수록 여론은 악화되는 역설 구조**

- 긍정이 상대적으로 높던 6월(폐지 기대·검찰개혁 지지)이 7월 '장윤기 논쟁'을 기점으로 꺾였고, 법안 통과 이후 오히려 부정 최고치 경신



- 정치 참여도가 높은 댓글 공간일수록 반감 증폭되는 경향(게시물과 구분 필요)
 → 전체 게시물 부정 **56.41%** < 유튜브 **77.28%** < 커뮤니티 **85.99%** < 네이버뉴스 **89.81%**

○ 감성 연관어

온라인 전체 게시물 감성 연관어 (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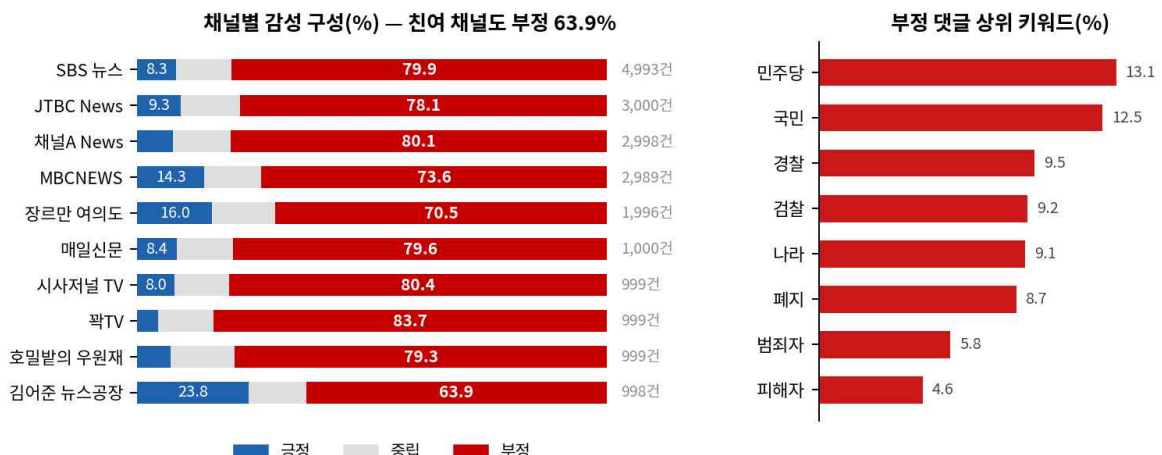
- 부정 연관어는 범죄(17,247건)·우려(11,971건)·논란(6,393건)·피해(6,016건)·부작용(4,984건)·억울한(3,913건)·견제(3,672건)·증거인멸(2,141건) 등 치안 불안·견제 부재 어휘가 다수
- 긍정 연관어는 앞서다(2,466건)·충분한(2,409건)·마련하다(2,189건)·안전(2,100건)·보완하다(2,043건) 등 제도 보완 수식어 중심으로, 1위 빈도가 부정의 1/7 수준에 그침
- 중립 연관어 상위권에 '피해자보호'(3,438건)가 위치
→ 찬반 양측 모두 '피해자 보호'를 자기 논리로 소환하는 프레임 전장

□ 유튜브 영상 댓글 분석(N=20,971)

※ 분석 대상: SBS·JTBC·MBC·채널A 등 방송사 뉴스 및 장르만 여의도·김어준 뉴스공장 등 댓글 수 1000개 이상 정치 채널 21개 영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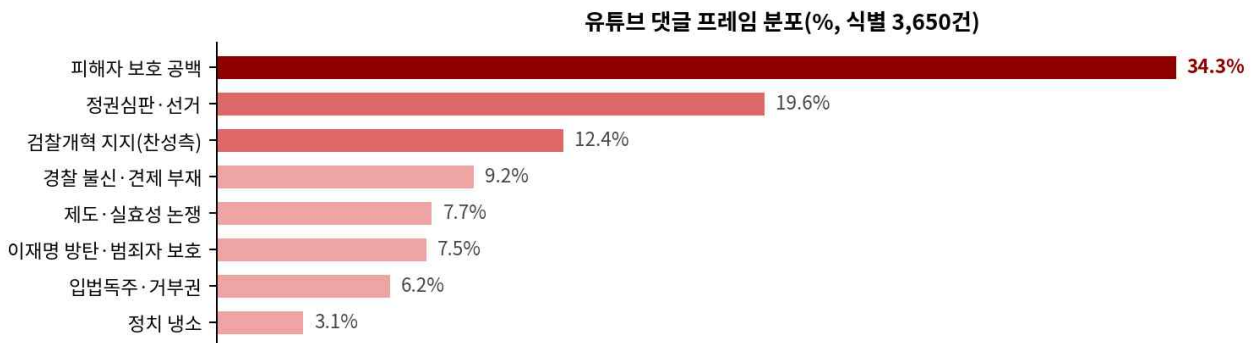
○ 감성구성비율

- **부정 77.28%** > 중립 12.28% > **긍정 10.44%**



- 방송사 뉴스 채널 댓글은 부정 73~80%로 균질. 친여 성향 시청층 채널(김어준 뉴스공장)조차 부정 63.9%로 지지층 결집 채널에서도 부정이 3배 가까이 우세
- 키워드 '지옥'이 3.1%로 유튜브에만 상위 진입
→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"지옥에나 가세요" 발언이 감정 언어로 확산된 결과

○ 주요 프레임 (유튜브 댓글 표본 20,971건 중 프레임 식별 3,650건)



- 피해자 보호 공백 34.3%로 전 채널 중 최고 → 영상 매체 특성상 장윤기·돌려차기 등 사건 서사가 감정 이입형으로 확산되는 진원지
- 폐지 찬성측 프레임(검찰개혁 지지) 12.4%는 채널 중 가장 높으나, 1위 프레임의 1/3 수준에 그침
- 프레임별 대표 댓글

※ 아래 인용은 프레임별 대표 사례로,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연구원의 견해가 아님

• 피해자 보호 공백

"장윤기 강간살인마, 이 법이 1달 전에 통과됐으면 장윤기는 일반살인으로 살고 나옴"

• 경찰 불신

"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을 믿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말 그대로 경찰국가 아닐까요"

• 이재명 방탄

"어차피 자기 감옥 안 가려고 폐지한 거잖아 ㅋㅋ"

• 입법 독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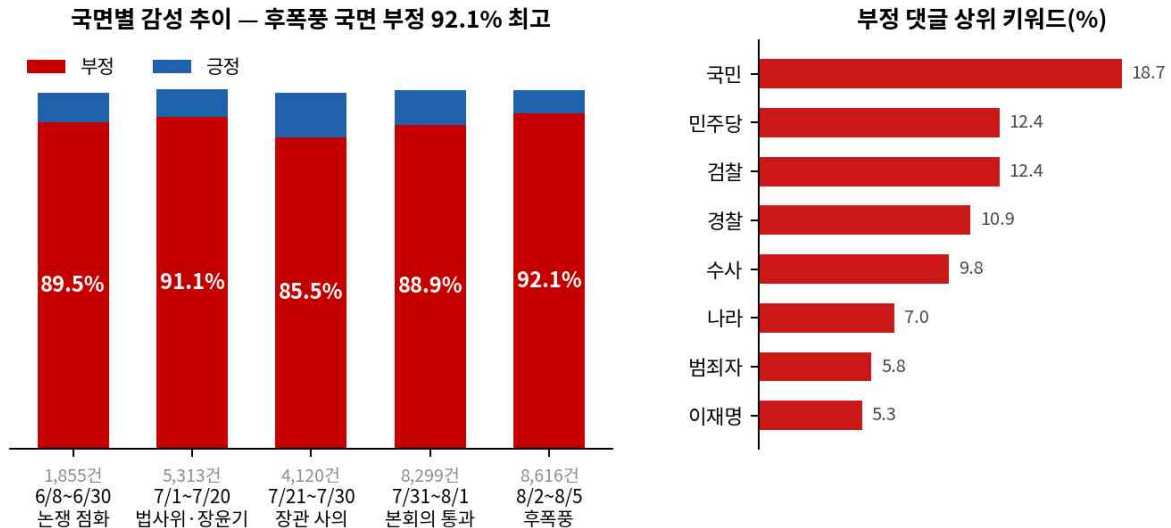
"검수완박 날치기에 이어 이젠 없애네,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? 일반 국민들 들먹이지 마라"

□ 뉴스 기사 댓글 분석(N=28,203)

※ 분석 대상: JTBC·MBC·SBS·채널A·경향·동아·문화·연합·조선·한겨레·한국경제·한국 등 댓글 수 500건 이상 35개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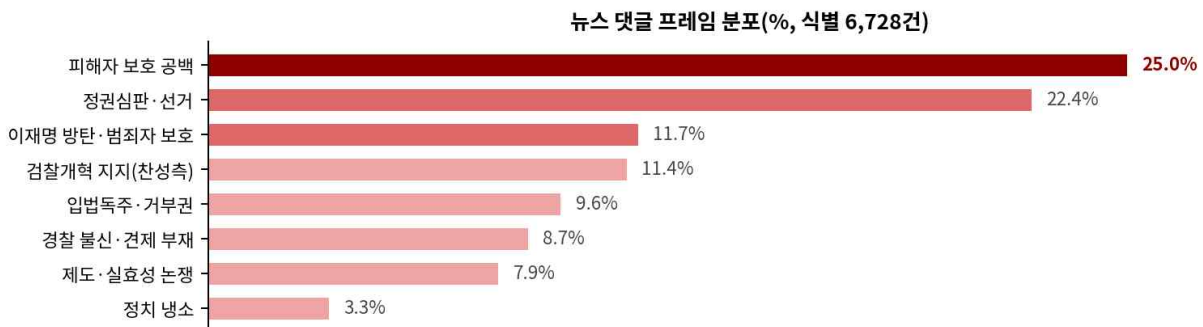
○ 감성구성비율

- **부정 89.81%** > **긍정 8.45%** > **중립 1.74%**



- **전 채널 중 부정 최고(89.81%)**, 법 통과 후 ‘돌려차기 피해자 후폭풍’ 국면 (8/2~8/5)에서 92.1%로 정점 → 사후 여론이 더 악화되는 구조

○ 주요 프레임 (뉴스 댓글 표본 28,203건 중 프레임 식별 6,728건)



- 피해자 보호 공백 25.0% + 정권심판·선거 22.4%가 양대 축으로, 두 프레임 합이 절반에 육박(47.4%)
- ‘이재명 방탄’ 프레임이 채널 중 최고(11.7%) → 재판 중인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결합해 “자기 재판 지우기” 논리로 정착
- ‘정권심판’ 프레임도 22.4%로 최고 수준 → 뉴스 댓글 공간에서 보완수사권 이슈가 곧바로 선거 언어(총선 낙선운동·탄핵)로 변환

- 프레임별 대표 댓글

※ 아래 인용은 프레임별 대표 사례로,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연구원의 견해가 아님

• 이재명 방탄·범죄자 보호

“국민만 피해보는 괴상한 법. 민주당은 온통 이재명 방탄에만 목숨 거는 듯”

• 입법 독주·정권심판

“국민 60% 반대에도 전당대회 앞둔 민주당이 속전속결 처리,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”

• 선거·정권심판

“김용민 지역구 어디냐? 다음 총선에서 꼭 떨어뜨려야 한다”

• 피해자 보호 공백

“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사법체계여야 한다. 정치인들의 유불리에 사법이 좌초해선 안 될 것”

• 폐지 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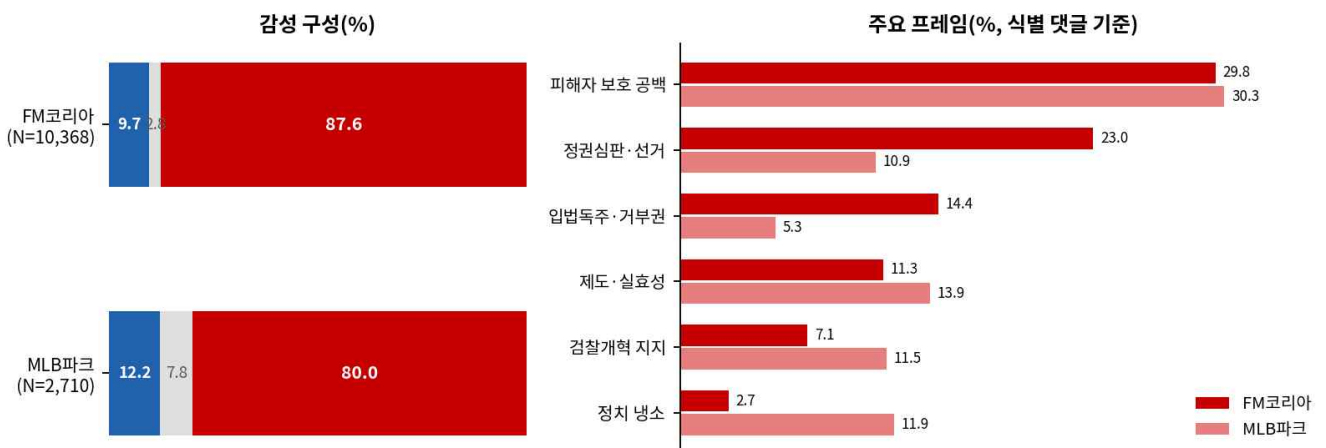
“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사에게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던 무소불위 권력을 이제 깨버릴 시간이다”

□ 커뮤니티 댓글 분석(N=13,078)

※ 분석 대상: FM코리아 댓글 100개, MLB파크 댓글 20개 이상 기록한 게시글 194개(댓글 13,078개)

○ 감성구성비율

- 부정 85.99% > 긍정 10.19% > 중립 3.82%



- FM코리아는 정권심판(23.0%)·입법독주(14.4%) 등 정치 공세형, MLB파크는 제도·실효성(13.9%) 등 실무 검증·냉소형 → 같은 부정이라도 결이 다름
- 긍정 판정 댓글도 “검찰 특권은 문제였다” 수준의 조건부 동의가 다수

○ **주요 프레임** (커뮤니티 댓글 표본 13,078건 中 프레임 식별 2,296건)

- **피해자 보호 공백 29.9%** > 정권심판·선거 20.6% > 입법독주·거부권 12.5% > **제도·실효성 11.8%** > 검찰개혁 지지 8.0% > 이재명 방탄 6.9% > 경찰 불신 5.6% > 정치 냉소 4.6%

- **제도·실효성 프레임(11.8%)이 타 채널 대비 최고**

→ 전세사기·경제범죄 수사 공백, 전관 변호사 비용, 공소청 기소 판단 한계 등 생활 밀착형 검증 논쟁 활발

- 프레임별 대표 댓글

※ 아래 인용은 프레임별 대표 사례로,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연구원의 견해가 아님

• **경찰 불신·생활 치안**

“당장 당근·종고나라 사기당해서 경찰한테 가봐라, 사건 접수 의지도 없다”

• **제도·실효성**

“경제 범죄는 사기꾼들만 노란 것. 경찰 수사역량이 강력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, 경제사범은 전관 변호사한테 돈만 주면 무죄 날 것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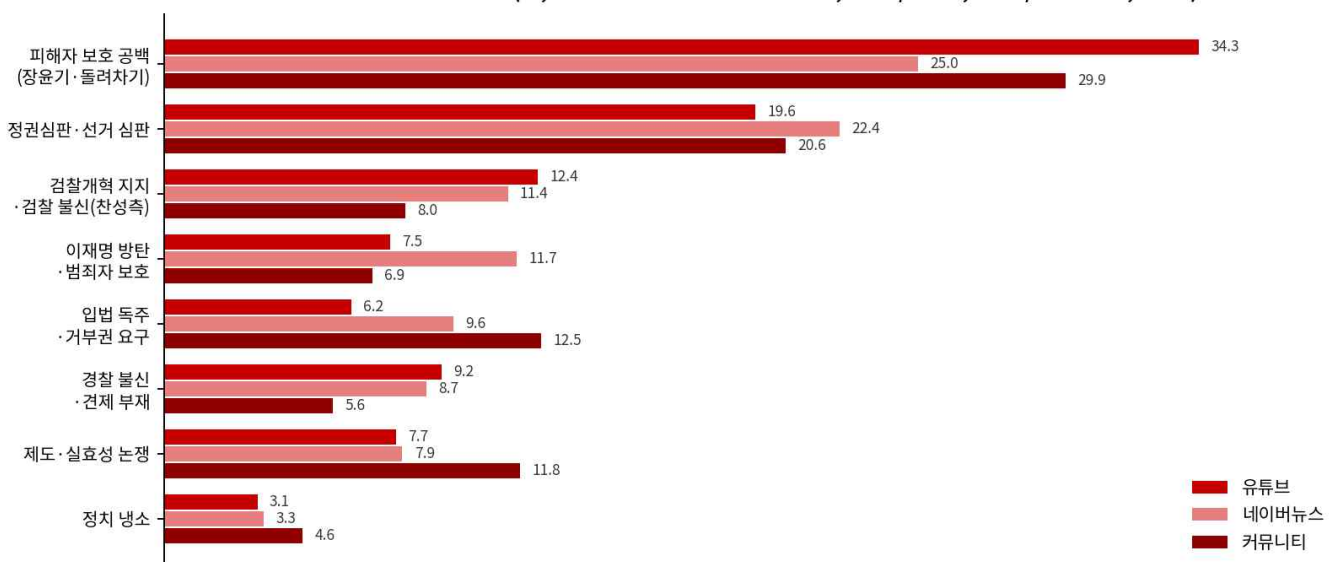
“중수청·경찰청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만으로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기소하고 판단하나”

• **선거·정권심판**

“어차피 2년도 채 안 남음. 이게 진짜 안 좋다면 총선 때 결과가 나오겠지”

□ 채널 종합: 프레임 및 키워드 비교

채널별 지배 프레임 분포(%), 프레임 식별 댓글 기준 · 유튜브 3,650건/뉴스 6,728건/커뮤니티 2,296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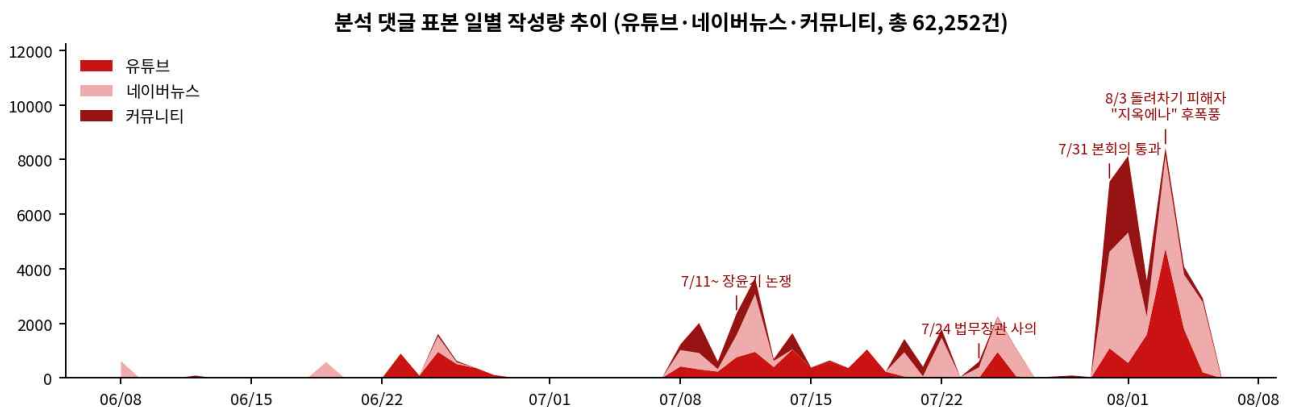
- 전 채널 공통 1위는 '피해자 보호 공백(장윤기·돌려차기)'으로, 추상적 권력구조 논쟁이 아니라 "내가 피해자가 되면"의 생활 공포로 이슈가 치환되어 있는 상태
- 2위는 전 채널 공통 '정권심판·선거'
→ 부정 정서가 대기 상태의 투표 의향으로 전환되는 통로 확인
- 폐지 찬성측 논리(검찰개혁 지지)는 8.0~12.4%에 그치고, 그마저 '노무현·내란 청산' 과거 서사에 의존 → 미래 편익 논리 부재

채널별 상위 키워드 (댓글 단위 출현율 %)



- 네이버뉴스는 '국민'(18.4%)이 1위 → "국민 뜻 대 강행" 대립 구도가 언어 층위에서 형성
- 커뮤니티는 '경찰'(9.3%)이 '검찰'(7.4%)을 역전
→ 논쟁의 무게중심이 검찰 존폐가 아니라 "경찰을 믿을 수 있는가"로 이동

□ 분석일별 댓글 추이



- 7/31 법안 통과일과 8/3 '돌려차기 피해자 후폭풍'이 최대 분출 구간
→ 법안 통과가 이슈 종결이 아닌 2차 확산의 트리거로 작동

3. 시사점

- 법안 통과(7/31) 이후에도 부정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(8월 1주 64.94%) 언급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, 입법 완료가 이슈를 종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2차 확산의 계기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남
- 여론의 중심축은 '검찰개혁 찬반'이라는 제도·진영 구도에서 '피해자 보호·치안 불안'이라는 생활·안전 구도로 이동
- 다만 감성 비율의 절대 수준은 분석 방법(중립 최소화)과 수집 대상 특성의 영향을 받으므로, 본 분석의 해석은 동일 기준으로 측정된 시계열 변화(6월 1주 51.11% → 8월 1주 64.94%)와 채널 간 상대 비교에 한정함

※ 분석의 한계

- 댓글 감성분석은 중립 최소화 원칙에 따라 반어·조롱을 긍·부정으로 환원한 결과로, 통상 기준보다 부정 비율이 높게 산출될 수 있음
- 유튜브·네이버뉴스 댓글은 이슈 관련 주요 영상·기사 표본 기반으로 전체 모집단과 다를 수 있음
- 데이터 수집 대상 커뮤니티는 20~40대 남성 중심으로 연령·성별 및 정치 성향 분포가 전체 인구와 상이하며, 본 사안에 대해 부정 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. 또한, 원 게시글(스레드) 맥락 전파 과정에서 스레드 내 소수 반론이 지배 성향으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어, 전체 국민 여론을 대표하지 않음
- 프레임 비율은 식별 댓글(17~24%) 기준이며, 단문 댓글은 식별에서 제외됨
- 온라인 여론은 정량 여론조사와 병행 해석 필요